

auribrief.

No. 39

공공청사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방안 연구

엄철호 부연구위원 임현성 연구원

1. 서론

공공청사¹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생활 서비스 거점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도시공간의 중심적 위치를 갖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청사 조성 시 지자체장이나 공무원 임의로 입지 및 프로그램이 결정되거나, 공무원 업무 위주로 시설이 계획됨에 따라 지역의 중심공간으로서 주민을 위한 서비스와 생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에는 과대한 규모의 ‘호화청사’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면적 기준 강화, 신축의 원칙적 금지, 인구규모별 청사규모 제한 등의 조치까지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신축의 전면적인 금지나 면적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자유로운 디자인과 지역 여건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복합용도나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 등을 저해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바람직한 공공청사의 조성을 위해서는 검토과정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규모 및 면적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과정을 합리화하고 조정하여 기획과 목적에 적합한 적절한 규모 및 면적을 산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공청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공공성과 상징성을 갖춘 공공청사 조성을 위한 절차 및 업무기준으로서 공공청사 건축디자인기준²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공공청사 건축디자인기준의 도입 필요성을 검증하고, 공공청사 조성체계와 조성업무의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공청사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공공청사 건축디자인 기준의 도입 필요성

1. 공공청사 관련 기준 및 지침의 한계

공공청사와 관련해서는 ‘정부청사관리규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시설규모 및 면적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도입가능 및 프로그램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여 적정면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면적기준만을 원칙적으로 제시하다보니

지역특성에 따른 업무형태의 다변화나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 도입 등이 청사계획에 적절히 반영될 수 없는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

청사 조성과 관련한 업무지침으로는 ‘공공발주자 역량 향상을 위한 설계관리지침 및 표준절차서’(국토해양부), ‘정부청사 건립 실무편람’(행정안전부),

1. 정부청사관리규정에서는 ‘청사’란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 부대 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범위를 사무용 건물로 한정할 경우, 중앙정부청사는 ‘08년 시설현황조사결과 보고에 의하면 15부, 2처, 18청, 4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1실(국무총리실) 총 903개의 청사가 있으며, 지방정부청사는 ‘0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광역시·도청 17개, 시·군·구청 164개, 읍·면·동사무소 2,731개로 총 2,932개가 존재한다.

2.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디자인(기획·설계·개선)하는데 있어 준수해야 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칙과 규범을 제시하기 위해 건축기본법에 근거한 ‘건축디자인 기준’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이 2009년 12월에 수립·고시되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지역별·시설별 기준을 별도로 설정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설계용역 관리편람’(서울시)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지침은 관련 업무를 표준화하여 업무수행상의 시행착오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단계에서 필요한 업무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공청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방향성과 이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은 다루고 있지 않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절차서의 성격이 강해 공공청사의 합리적인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 공공청사를 포함한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운영하고 있지만 내용의 대부분이 외형적인 형태나 색채 등의 항목에 치중되어 있고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은 디자인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용역을 발주하는 주체인 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전국 246개 지자체 청사의 면적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대도시에 위치한 청사이거나 최근에 건립된 청사일수록 공용공간이나 주민편의시설의 비율이 높은 청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업무공간의 면적비율은 면적기준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어, 결국 업무공간보다는 공용공간이나 편의시설과 같은 비업무공간의 비율이 과대청사의 주요한 원인임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면적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호화청사나 과대청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와 함께, 공용공간과 주민편의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청사조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호화청사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인식

호화청사 문제가 불거지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

이 마련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시민 1,400명과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우선, 청사에 대한 시설 만족도에 서 시민들은 특히 편의시설과 주차장 이용 측면의 불편함을 많이 지적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에도 시민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공무원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고, 편의시설 확충과 함께 협소한 업무공간을 개선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호화청사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대해서는 시민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은 다소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청사신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인구규모에 맞추어 청사규모를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시민 대부분이 찬성하는 반면에 공무원들은 반대 의견도 많아 중앙의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어느 정도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호화청사 개선을 위한 방향에 대해서 주민은 청사 계획 및 조성 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공론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공무원은 과연 어떠한 청사가 바람직한 청사이고 무엇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공공청사 건축디자인 기준의 필요성

이상의 분석 결과, 결국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면적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법적 조치, 외관이나 형태에 대한 디자인가이드라인, 관련 업무를 표준화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기준의 업무편람 등으로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바람직한 공공청사를 조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사 조성의 각 단계에서 중시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 초기 기획단계에서 설정한 명확한 컨셉이 시공 및 운영관리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계승

표1 호화청사 논란에 대한 동의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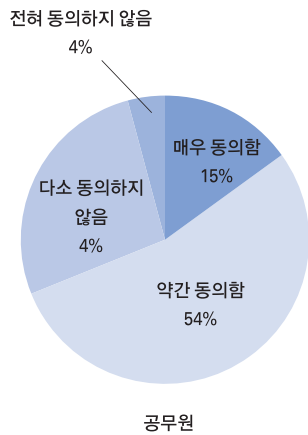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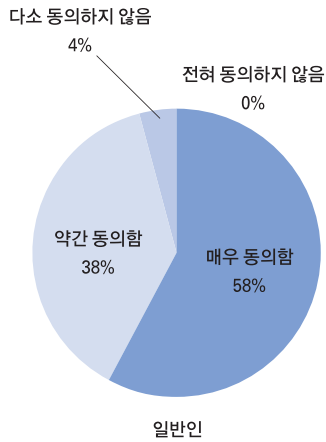


표2 청사 규제 정책에 대한 의견 (위의 증개축 유도정책에 대한 의견, 아래는 규모 제한 정책에 대한 의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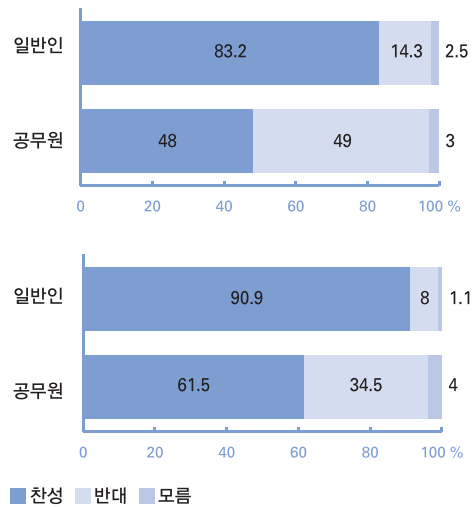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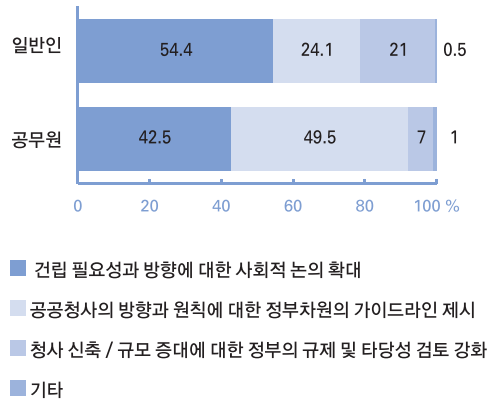


표3 공공청사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디자인, 매니지먼트의 관계를 설정한 절차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행히 2009년 12월에 공공부문 건축 디자인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이 따르거나 참고하여야 할 절차 기준으로서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사결정과 관련한 원칙과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

는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여기에서는 기획-계획 및 설계-시공-사용과 유지관리가 일관된 체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단계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서 공공청사 조성을 위한 절차기준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

3. 공공청사 조성업무의 문제점

호화청사로 지목받았던 사례를 포함하여 최근 조성된 국내 공공청사 사례를 대상으로 조성 프로세스 진행의 합리성, 조성절차에서의 관련 지침의 운용 실태, 공간 및 프로그램의 적정한 계획 및 활용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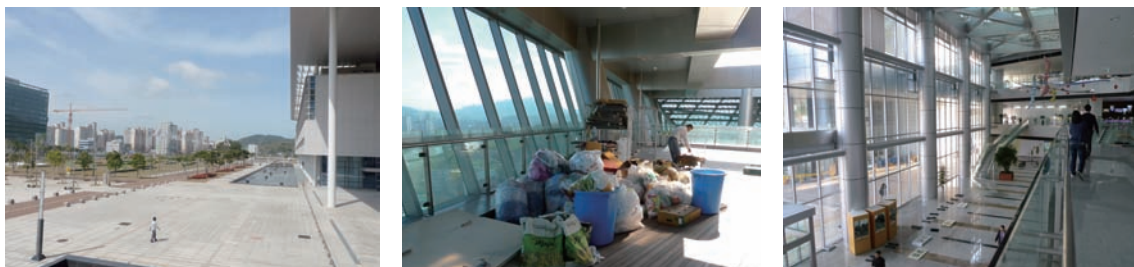
청사 조성과 관련한 업무가 단순 행정업무로 인식되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확보를 위한 행위로 기획과정이 인식되고 있으며, 그 결과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기획단계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부정확한 수요 예측 및 부실하고 획일적인 설계지침 등은 결국 공공청사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시설이용 측면의 고려 및 지역특성 반영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유사 사례의 면적 비율에 맞추어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적정한 면적을 도출해 내는 것과 지역을 안내한 입지 선정 등에 대부분의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가 많고, 예산확보 및 부지선정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추진 일정의 촉박함을 이유로 일괄입찰 발주를 적용하거나 가격이나 실적 위주로 설계자가 결정되는 등 발주처의 편의 위주로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있

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장, 행정담당자의 개인적 취향 등에 따라 초기에 설정된 계획방향을 무원칙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고, 심의나 시공과정에서도 초기 기획의도와 배치되는 방향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기도 하는 등 초기에 설정한 사업컨셉의 지속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 결과, 공간배분 및 프로그램이 지역의 수요나 여건과는 별개로 활용되고 있다. 기획단계에서 수요파악 미흡 및 형식적인 계획진행으로 인하여 내부 공간을 불가피하게 초기의도와 다른 용도로 전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과시적인 공간이 많거나 사용 빈도가 낮은 프로그램이 중요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어 전반적인 시설 활용도를 저해하고 있다.

이상, 심층조사를 통해 공공청사 조성업무의 문제점으로서 단순행정업무 위주의 사업 수행, 기획에서의 충분한 사전검토 미흡, 예산확보에 의존한 사업추진, 편의위주의 설계자 선정, 지역주민 등 관련 주체의 의견수렴 미흡, 초기 사업기획의 지속적인 유지계승 미흡, 타 사례 모방 등 설계지침 부실의 7가지 항목을 도출하였다.

현재의 청사 조성과정은 계획 · 설계 · 시공 · 운영이 하나의 연속적인 절차로 인식되지 못하고 제각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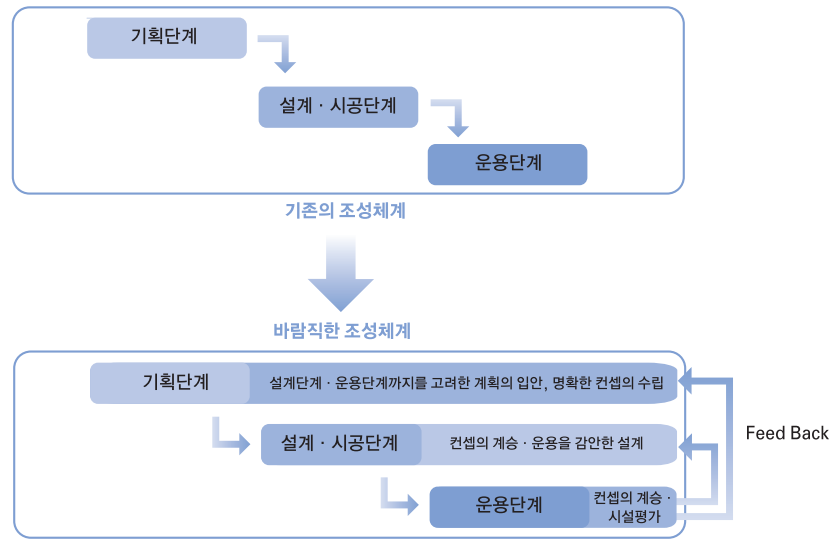
그림1 과시적으로 계획한 청사의 대규모 외부공간과(왼쪽) 수개층이 수직으로 오픈된 화려한 로비(오른쪽), 사용 빈도가 낮아 폐품처리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청사의 옥외 휴게공간(가운데).



개별적으로 독립된 업무로 진행됨으로써 각 단계에서 완결성을 가지고 있어, 초기에 설정한 사업컨셉이 지속적으로 계승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공청사 조성업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초기 기획단계에서 명확한 사업컨셉을 설정하고 각 프로세스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하면서 후속 프로세스로 계승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피드백할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

다. 기본구상, 기본계획, 설계, 시공, 운영관리 등 각 프로세스에서 필요한 업무내용을 사전에 결정함으로써 주관부서, 예산부서, 건축부서, 설계자, 시민 등 관련주체가 ‘언제,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공유하면서, 각 업무 프로세스별로 업무내용과 성과항목을 검증하고 검증 결과에 따라 다음 프로세스를 추진할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소위 ‘프로세스디자인’의 개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³⁾

표4 각 단계별 완결 중심에서 컨셉의 계승 중심으로의 전환



일본 치바시 공공건축 정비지침에서 제시한 프로세스디자인의 개념도

3. 일본의 공공건축 관련 정비지침이나 디자인 지침을 살펴보면 공공건축이 가져야 할 가치와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디자인 원칙과 기본적인 자세를 제시하면서 초기 기획단계에서 설정한 명확한 사업컨셉이 설계, 시공, 운영까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프로세스디자인과 메니지먼트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다.

4. 국외 공공청사 조성사례 및 관련기준·지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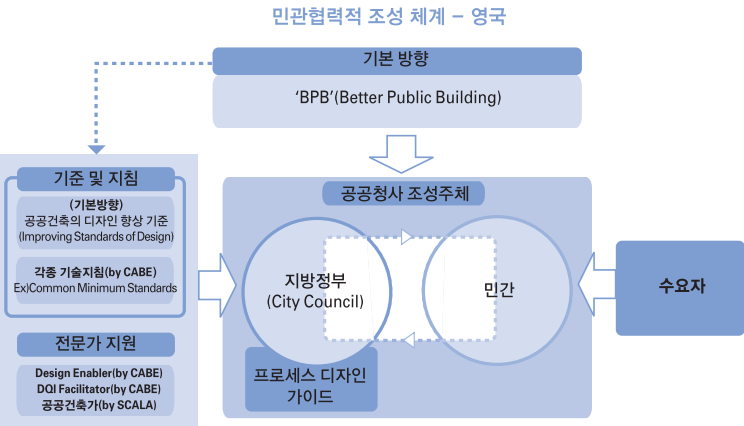
국외(영국, 미국, 일본)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첫째, 공공청사(혹은 공공건축)에 대한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공공청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동향을 분석하고, 둘째, 공공청사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정의 및 관련 기준이나 지침들을 확인하여 기준 간 체계를 파악하며, 셋째, 각 국가별로 우수 공공청사를 선별하여 조성경위 및 현황을 분석하였다. 공공청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시설로 공공청사를 인식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공공청사를 민관이 함께 만들어어나가는 우수한 디자인의 공공시설로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국가 자산으로서 효율적인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건축가 선정방식의 개선을 통해 초기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본은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의 여건에 맞는 기능과 디자인을 도입하여 지역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정책 및 제도적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청사의 바람직한 정책 및 조성방향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하여 세부운영 지침과 조성절차 중심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영국은 BPB(Better Public Building)에 의한 공공건축의 개선방향을 근간으로 중앙정부 기관인 CABA(the 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와 OGC(Office of Government 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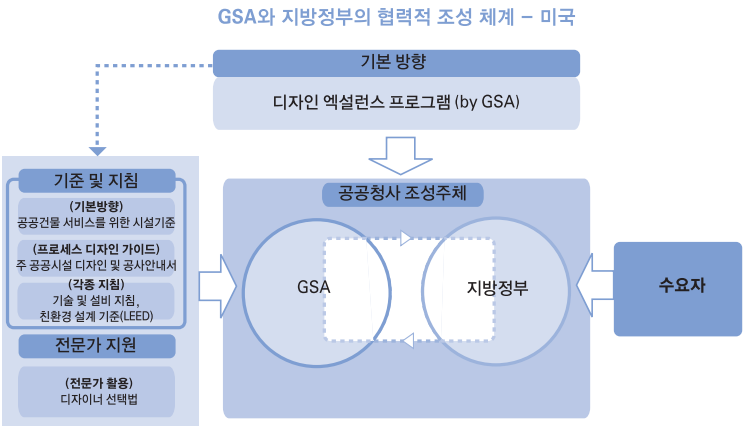
merce)에 의해 다양한 업무기준 및 주체별 역할 기준 등이 수립되고 각 지자체별로 절차기준에 관한 디자인 가이드가 설정되어 있다. 미국은 디자인 엑셀런스 프로그램(design excellence program)을 통해 선도적인 건축가 선정방식을 도입하고 GSA(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를 중심으로 다양한 성능, 절차, 디자인 기준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주별로 프로세스 디자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는 공공건축 품질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통해 공공건축의 바람직한 방향을 법령화하면서 지방정부의 공공청사 설립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성능지침, 전문가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지역별로 공공건축에 대한 프로세스 디자인 기준 및 업무매뉴얼을 설정하여 청사조성 시 적용하고 있다.

각 국가의 공공청사 선도 사례를 살펴본 결과, 지역 여건 및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시민과의 합의를 거쳐 조성되고 있으며, 행정업무와 시민의 공간을 공유하는 복합청사로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의 도시맥락과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 시설을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 설계기법의 적극적인 도입과 함께 민관 공동투자를 통하여 효율적인 시설조성을 추진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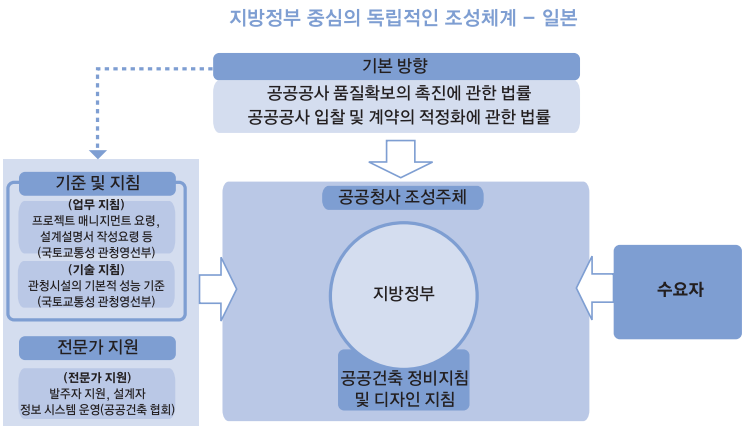
표5 국가별 공공청사 조성체계



지역활성화의 거점공간으로 기능
(Manchester Civil Justice Centre, 영국)



시민 광장으로 활용되는
public plaza(Austin city hall, 미국)



주변에 대한 배려와 개방성을 강조
(후사시 청사,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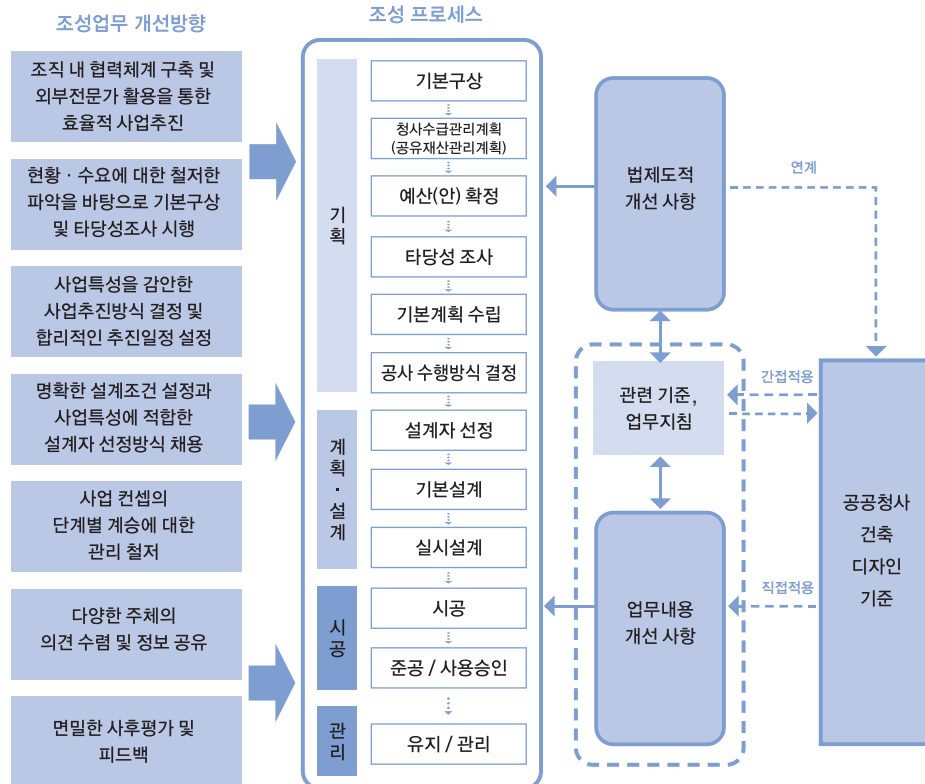
5. 공공청사 건축디자인기준 설정방안

먼저 공공청사 조성체계의 개선방향을 정리한 다음, 공공청사 조성체계 개선방향과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한 공공청사 조성업무의 한계를 바탕으로 공공청사 조성업무의 개선방향으로서 첫째, 조직 내 협력체계 구축 및 외부전문가 활용을 통한 효율적 사업추진, 둘째, 현황·수요에 대한 철저한 파악을 바탕으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시행, 셋째, 사업특성을 감안한 사업추진방식 결정 및 합리적인 추진일정 설정, 넷째, 명확한 설계조건 설정과 사업특성에 적합한 설계자 선정방식 채용, 다섯째, 사업 컨셉의 단계별 계승에 대한 관리 철저, 여섯째, 다양한 주체의 의견 수렴 및 정보 공유, 일곱째, 면밀한

사후 평가 및 피드백을 설정하였다.

공공청사 건축디자인기준은 공공청사 관련 업무 수행에서 지켜야할 원칙과 바람직한 방향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공공청사 조성업무 개선방향을 조성 프로세스에 적용함에 있어 우선 공공청사 조성 업무내용의 개선과 관련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면서, 공공청사 조성과 관련한 면적기준, 지침 등과도 연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공청사 건축디자인기준을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기본원칙, 단계별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면서 공공청사 조성체계 및 절차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표6 공공청사 건축디자인기준의 역할



현장의 업무지침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공공청사 건축디자인기준의 체계를 구성함에 있어 건축디자인기준에서 담아야 할 원칙으로서 4가지의 개념을 정리하였는데, 첫째는 각 프로세스에서 필요한 업무내용을 사전에 결정함으로서 관계주체가 ‘언제,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공유하는 ‘프로세스 디자인’, 둘째는 관련된 각 주체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판단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설명책임(어카운터빌리티)을 다하는 ‘어카운터빌리티’, 셋째는 명확한 방향설정,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과 요구되는 성능, 그리고 구체적인 설계조건을 명기하는 ‘가치의 우선순위’, 넷째는 초기 기획단계에서 설정한 사업 컨셉이 각 프로세스에서 계승되고 피드백 될 수 있는 ‘사업 컨셉의 계승’으로 설정하였다.

공공청사 건축디자인기준 체계에서는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의 5가지 주안점을 바탕으로 공공청사 건축디자인기준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각 단계별로 검토사항, 주안점 및 유의사항, 관련주체

별 역할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며, 기존 업무
편람과 관련 기준과의 연계체계를 가지도록 구성하
였다.

이상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공청사 건축디자인 기준의 단계별 주요업무를 설정하였는데, 기본적으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의 구성체계를 따르되 공공청사의 조성절차에서 기획단계, 계획·설계단계, 시공단계, 시용단계의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주요한 업무내용에 따라서 재구성하였다. 우선 기획단계에서는 유사시설 조사, 주민참여방식 설정, 공공청사 조성절차에 따른 타당성 조사·검증, 기본계획 수립 등의 항목을 추가하고, 프로그램 및 사업추진방식 결정 항목을 공공청사 업무에 따라 사업추진방식 결정, 사업추진일정 결정, 관리운영 계획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계획·설계단계에서는 시설성능 설정, 과업지시서/계획·설계지침 작성 등의 항목을 추가하고, 통합디자인시행, 디자인 검토 및 타당성 평가 등 공공청사 사업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규정하지 않았다. 시공단계에서는 디자인 감리를 사후설계관리업무로 용어를 변경하

표7 공공청사 건축디자인기준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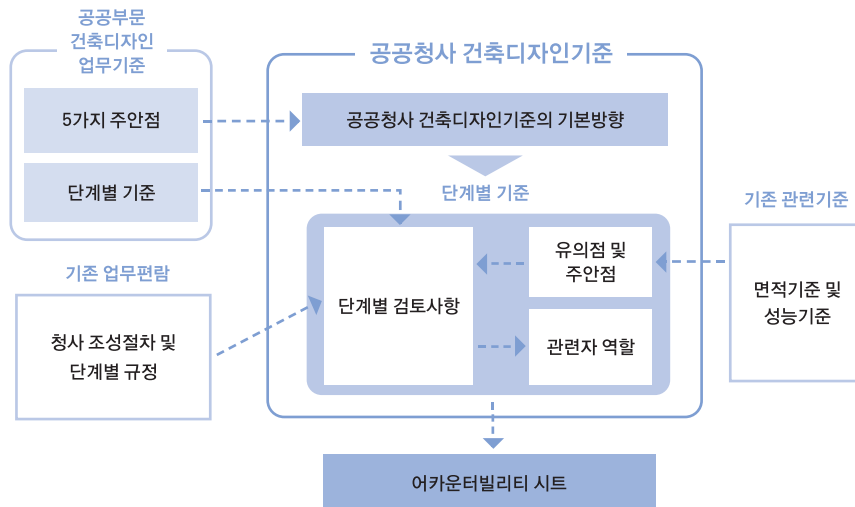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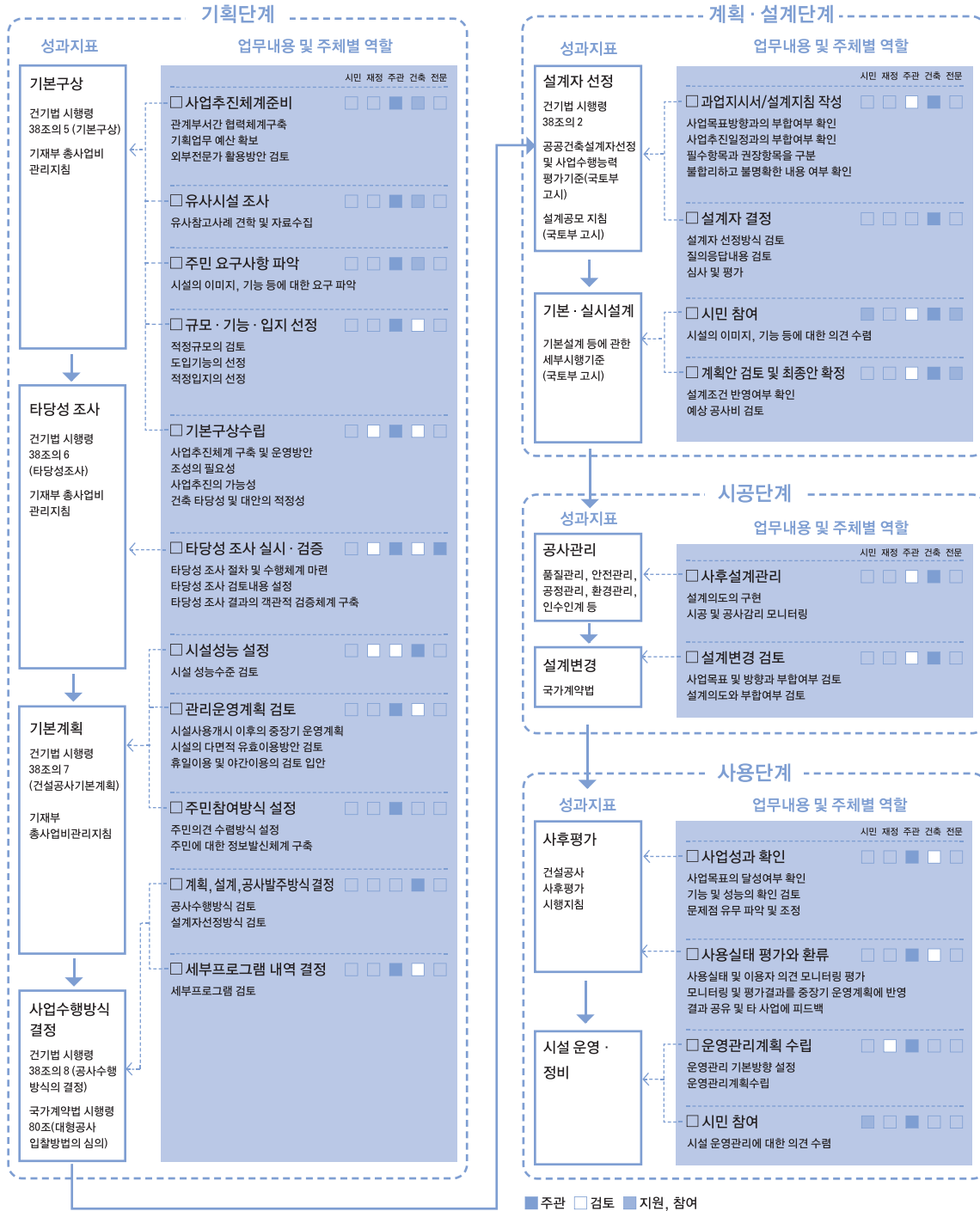


표8 공공청사 건축디자인 기준의 단계별 주요 업무내용



여 규정하고, 설계변경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인 세부업무단위로 설정하였으며, 사업단계에서는 사업수행 성과를 평가하는 사업성과 확인 업무를 추가하였다.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은 국토부 고시를 통해 제정되었으나, 아직까지 범부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근거한 공공청사 건축디자인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청사 소관부

처인 행정안전부와 건축디자인기준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공공청사 건축디자인기준'을 제정하여 기준의 제도적 위상을 확보하고, 지방채발행 승인 심사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지자체의 각종 심의에 '공공청사 건축디자인 기준'을 활용·반영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공공청사 관련 기존 업무편람이나 기준 내용 중 업무내용, 주안점 및 유의사항 등은 공공청사 건축디자인기준에 포함시켜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6. 연구의 성과와 한계

연구의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공공청사 조성을 위한 절차 및 업무기준으로서 공공청사 건축디자인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방향과 체계,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검토·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청사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강력한 기준 및 지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청사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획 및 계획과정에서 검토하게 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면적·기능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를 가진 실천수단으로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는 호화청사가 사회적으로 비판 받으면서 공공청사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외형적인 형태나 규모를 규제하는 방향 위주로 편중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업무와 절차를 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을 지역별 건축디자인기준으로 구체화한 '영주시 건축디자인기준'과 더불어 시설별 건축디자인기준으로 구체화하고자 한

처음의 시도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축디자인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같이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는 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건축디자인기준의 구체적인 업무내용별 검토사항과 주안점 및 유의사항 등은 '초안'을 제시하는데 그쳐, 각 항목별로 세부적인 업무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행정담당자, 설계자 등 실제 공공청사 조성업무에 관여하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내용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다듬는 현장 중심의 보다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을 바탕으로 시설유형별로 건축디자인기준을 수립할 경우 시설별로 '절차기준'의 차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시설별 '주안점 및 유의사항'의 내용의 구체성 및 이를 어떻게 '절차기준'과 연계하여 각각의 건축디자인기준에 담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auribrief](#).